

# 연구노트

-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신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젠더 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이동에 관한 연구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신 선 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미취업 여성 청년층(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는 2012년 현재 약 278만 명이다. 그 중에서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고 있거나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 194만명 정도를 제외하면 84만명 정도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했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이들은 구직활동 혹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32만명 정도), 육아-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39만명)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13만명 정도 된다.

이 연구는 미취업 여성청년층 중에서도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활동이 취업하는데, 특히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가 성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가 남성 청년층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1) 미취업 여성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시계열분석, 2) 대졸 청년층 취업 준비활동의 성별 차이 분석, 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분석, 4) 미취업 청년층 고용정책과 여성 참여 현황, 5) 미취업 여성청년층 취업지원정책 제안이다.

첫째, 미취업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시계열분석에서는 2000년 이후 미취업 여성청년층 인구규모 추이, 여성청년층 고용률 추이,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중인 자의 인구규모 추이 등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미취업 여성 청년층 인구의 지역별 분포, 교육수준, 전공분야, 직업훈련 경험, 취업준비 경험, 희망하는 직업-산업-소득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준비활동의 성별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취업준비활동의 분석범위는 대학 재학 중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취득 경험, 각종 취업시험(공무원, 공단, 교원, 전문자격시험(회계사, 법무사 등), 언론사 시험 등) 경험, 청년고용정책 참여 경험 등이다.

셋째,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 및 취업준비활동 중에서 취업하는데,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층 집단에 따라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대상 집단별로 구분하여 구직 및 취업준비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활동은 긍정적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일부 활동은 집단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정책”에 여성 참여 현황을 파악한 후, 기존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이 여성 청년층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밖에 취업률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성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정책 개발하고자 한다.

## 연구의 기대효과

여성 청년들은 교육성취도도 높고 취업준비활동에도 남성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인 취업성과는 남성에 비해 낮다. 이 연구는 학업종료 이후 노동시장에서 취업성과의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개선 및 여성 청년층에 특화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청년층을 위한 단순한 일자리 기회가 아니라, 직업세계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기회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자 한다.

# 젠더 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 유연화 등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사회에서는 복지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특히 복지체제의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담론 속에서 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젠더관점에서의 점진 및 복지국가 재구성 논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에서의 젠더이슈를 추출하여 성인지적 복지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복지패러다임의 구축과 둘째, 젠더 통합적 복지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저출산고령화정책의 젠더의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 복지국가와 젠더

현재까지의 복지논쟁은 주로 성장과 분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논의를 위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에 있어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Family Model)에서 맞벌이모델(Dual Earner Family Model)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젠더관점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엄규숙, 2011; 윤홍식, 2012).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복지패러다임 논의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서 개편방안을 필요로 하며, 특히 구체적인 정책별로, 구체적인 제도와 작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복지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젠더관점에서 제시하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복지현안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및 사회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의 중단위험 및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 셋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아동 및 노인의 돌봄정책을 돌봄자 및 돌봄 대상자 각각의 관점에서 성인지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위 세가지 문제는 영역별로 분리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정책현장에서는 상호간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개별 정책 간의 연결고리를 적절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개별 정책 간 충돌하거나 정책추진의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세가지 문제를 어떤 복지패러다임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주의 복지정책 연구자들은 사회정책이 남성생계부양자, 임금노동에 기초한 복지패러다임만이 아니라 이인생계부양자,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여 왔다(Orloff, 1993; O' Connor, 1993; Sainsbuty, 1996 등).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적 이슈는 노동시장과 가족내 젠더 형평성의 문제이다. 장시간 근로시간과 가족내 불공정한 성별분업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이 일과 자녀양육, 노인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OECD, 2002).

그런데 이와 관련된 각국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원칙은 해당사회의 정치적 지향성과 태도가 문화적 가치와 규범과 결합하여 그 사회가 지향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참여를 강조하는 경우와 여성의 모성역할을 지원하는 경우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영역-정치영역-가족영역을 연계한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사회지출의 효율적인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방안이 필요하다(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외국의 경우,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별로 복지와 젠더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복지체제의 재구성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안적인 방안으로는 EU의 일-가정 양립레짐, OECD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관계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가족과 사회연대를 강조하는 대안적인 패러다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EU에서는 보육서비스, 여성 노동시장 참여,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일-가정 양립레짐(Work-family Reconciliation Regime)을 제시하고 있으며(EU, 2010),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국가가 어떠한 젠더역할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가족현금급여와 서비스의 조합과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남성부양자” 가족에 기반한 가족관계를 보이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성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노동시장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Sleebos, 200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태도, 정책의 젠더효과 분석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복지의식과 태도, 저출산과 돌봄과 관련한 정책의 젠더효과를 얼마나 평가하고 체감하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책의 젠더효과를 보다 명료히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혜집단의 정책평가와 전문가들의 정책평가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도분석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또한 젠더관점에서 기존의 제도를 분석하는데, 주요대상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 제도적 특성으로 인한 젠더효과, 제도의 적용과정에서의 성별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제도분석에서는 젠더를 중심으로 비교하되, 본 연구의 주요주제인 돌봄과 저출산의 이슈를 적용시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이동에 관한 연구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흔히 ‘결혼이민자’ 하면 한국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가 서툴고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이 많은 이들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 중에는 여전히 이러한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제결혼 역사가 길어지면서 초기 적응단계를 지난 결혼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00년대 초부터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생활 10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2000년대 중후반에 이주한 이들 역시 한국생활 초기에 흔히 겪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벗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결혼이민자, 귀화자 중 한국에 거주한지 5년 이상 된 이들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아도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이들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이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체류 장기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된 일반귀화자의 경우, 결혼이민자 보다 국내체류기간이 더욱 긴 상황이다.

한국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이민자들의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관련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 한국생활기간 2-5년을 기준으로 언어문제, 문화차이, 음식이나 기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줄어드는 반면, 자녀문제, 경제문제, 편견이나 차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만큼,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장기화 추세는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초기적응 단계를 지난 결혼이민자 및 일반이민자의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1) 전기택 외,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p.123.

2)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 p.520.

3) 김이선 외, 201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p.258.



그런데, 그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 정책은 주로 한국어 습득과 자녀양육, 안정적 가족관계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에 초점을 둔데 비해 초기적응 단계를 지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책 의제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정책 개입 방향도 설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2007-2011년 기간 동안 관련 사업에 추진된 예산 구성을 보아도 한국어교육과 취학전 자녀 성장 등 초기적응 단계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이 5년간 투입된 전체 예산의 58.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 반면, 그 외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연구의 한계와도 직결되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국내에서 많은 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적응과 가족생활 초기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몇몇 측면에 초점을 두었을 뿐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역동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생활과정 중에 제기되는 각종 과제에 대응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자체가 언어 적응 등 특정한 과제의 해결만으로 완성되는 단선적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초기 적응단계를 거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 진전양상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제와 이에 대응해가는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기존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바를 포착하고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지원 뿐 아니라 일반적 지원까지를 포함해 포괄적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국내거주기간에 따른 이민자의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응·사회통합 진전 양상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세부 집단별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거주기간에 따른 적응·사회통합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기 적응 단계를 지난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적응 및 사회통합과정에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요와 기존 정책의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